

AI 방역 개선대책으로 양계농가 목 조르기 중단해야... 양계업 미래는 있는가?

- 삼진아웃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케이지면적 확대 등 양계농가 사지로 내모는 개악 -
- 졸속적·무책임적·농가전가적 AI 개선대책 강력 규탄 -



▲ 지난 3월 24일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관련 축산단체 간담회에 앞서 본회를 비롯한 축산단체협의회는 농가 규제 일변도 방역 개선대책에 대해 규탄 했다.

불구하고 정부는 삼진아웃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산란계 케이지 면적 확대 등의 개악으로 양계인들을 예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이에, 본회를 비롯한 금관련단체(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육계협회) 및 축산단체협의회는 농가에게 일방적

본회는 지난 3월 24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개최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관련 축산단체 간담회'에서 농가에게 일방적 규제만 강화하는 방역대책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부의 졸속적·무책임적·농가전가적 AI 개선대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고병원성 AI에 뺏겨 대안 제시도 없이 일방적 농가 규제만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예이고 특히, 작년 11월 발생한 고병원성 AI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초기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것이 지적됐음에도

규제만 강화하는 방역대책에 대해 간담회 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방역개선이 축종별로 상이한 점을 강조하며 AI 방역 개선을 위해 축종별 2차 간담회를 3월 26일(육계)과 27일(종계·산란계) 진행했으나 핵심 사항에 대해 불통 일변도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 규제 위주의 방역 개선대책 도입 강행 의사를 표출하여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는 불통이 얼마나 큰 위협을 초래하는지 경험하였고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도 깨달았다. 규제에 앞서 농가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길 바라며 양계산업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AI 방역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양계**